



주간통일정세 2010-37(2010.09.06~09.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3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이 전언대로라면 북한 당국은 당초 '3일(금) 행사 등록, 4~5일 김일성 동상 참배 등 평양시내 일정, 6일(월) 본회의 개막' 정도로 당 대표자 회 계획을 잡았다가 뚝지 알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현재 시당과 군당 대표들은 혜명동의 ‘외국인 호텔’에, 방청객 참가자들은 혜명여관에 각각 투숙하고 있다”면서 “계속 오늘 간다, 내일 간다 하며 출발을 계속 연기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함.
  - 방송은 “혜산시에 발이 묶인 지방당 대표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현지시찰했던 공장과 기업소,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 사적관 등을 돌아보며 처음 이틀간을 때웠다”면서 “그 후에는 계속 도당 회의실에 모여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기록영화 등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이어 “참석자들이 대부분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이다 보니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행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방중후 첫 공개활동…공연관람(9/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비공식 방문(8/26~30)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인민군 호위사령부인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한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연주체가 호위사령부라는 점에서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30일 중국 투먼을 거쳐 북한 남양으로 귀환한 직후 북한 언론매체들이 중국 비공식 방문을 일제히 보도한 이후 9일만이며, 특히 이번주나 내주초에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대표자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림.
  - 예술선전대는 혼성중창 ‘경례를 받으시라’, 여성독창 ‘어머니당이여’, 여성5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으며, 공연 관람 후 김 위원장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힘.
  -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간부들이 함께 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 위원장의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은 지난 2월(중앙통신 보도날짜 2월18일)과 6월(중앙통신 보도날짜 6월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 평양시민 “후계자는 정은 동지”(9/9, NHK)

- 방송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한 평양시민이 “후계자인 김정은 동지가 혁명의 위업을 더욱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인식이 북한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평양 시민임을 자처한 한 남성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 대한 NHK 방송의 질문을 받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동지가 혁명의 위업을 더욱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남성은 이어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 북한 국민은 이미 알고 있으며 4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지금까지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이름과 모습을 단 한 차례도 전한 적이 없지만 이 남성의 발언으로 볼 때 김정은이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북한 국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

### ● 당대표자회 지연에 김정일 건강이상설 확산(9/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함경북도 라진시 간부인 소식통을 인용, “지난 7일 함경북도 당과 행정 간부회의가 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도당 비서가 당대표자회 참석차 평양에 가 있는 책임비서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장군님(김정일) 건강이 좋지 않아 회의를 미뤘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 도당 비서는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해 장군님 건강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비판하면서 무의식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방송은 또 “당대표자회 개막이 늦어지면서 ‘김정일 와병설’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신의주 소식통의 말을 전함.
- 이어 “김 위원장이 연사홀 공연을 관람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도 ‘건강 이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
-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귀국 이후 1주일 이상 공개활동을 하지 않다가 인민군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보도날짜 8일), 인민군 직속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 음악회’(보도날짜 9일),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보도날짜 10일)를 잇따라 관람



- **北 당대표자회 앞두고 내부 통제 극심(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사실상 '계엄상태'를 선언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연사군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각 지방별 당대표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부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을 총동원해 계엄상태에 들어갔다"면서 "모든 도로를 통제할 뿐 아니라 국경지역의 도시에서는 마을 주변의 오솔길에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방송에 "각 인민반별로 경비초소를 보강하고 경비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경비를 강화했고, 밤에는 공동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함.
  - 양강도 해산시의 소식통은 "양강도는 겨울이 길어 9월 초에는 감자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데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하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미루고 있을 정도"라고 밝힘.
  - 방송은 함경북도 회령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초 조직된 '130상무'가 시도 때도 없이 금속탐지기로 불법라디오, 휴대전화, DVD, 컴퓨터 등 모든 가전제품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기술장비를 지원받은 뒤 노동당 간부의 집까지 수색범위를 넓히는 등 전례없는 통제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함.
  
- **北 김정일, 자강도 광산 시찰...당대표자회는 언제?(9/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에 위치한 '3월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노천채굴장, 대형파쇄장, 선광장 등의 생산공정을 오랜 시간 돌아보고 기술개선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이해)했다"면서 "생산공정을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 개진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힘.
  -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경희·태종수·홍석형 당 부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김정일, 이틀째 자강도 시찰...당대표자회 '감감'(9/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운화공장을 현지지도하고 공장 안팎을 돌아봤다고 전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은 이 공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힘.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태종수·홍석형 당 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 김정일동향

- 9/ 7 김정일, 백두산선군혁명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한세, 대학병원 의사 최용림 등) 「감사」 전달(9/7, 중방)
- 9/ 8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감사」전달 (9/8,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등 동행 관람
- 9/ 8 김정일, 중국 호금도 주석의 큰물피해 관련 위문전문에 대한 답전 발송(9/8, 중방)
- 9/ 9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 관람(9/9,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태종수(黨부장들), 김명국·김원홍·현철해(軍 대장들) 등 동행
- 9/10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은하수 9월 음악회' 관람(9/10, 중통)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총참모장),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관람
- 9/11 김정일, 자강도에 위치한 '3월5일청년광산' 현지지도
  -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경희·태종수·홍석형 당 부장이 동행
- 9/12 김정일,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문화공장을 현지지도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태종수·홍석형 당 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비공식 訪中(8/26~30) 성과(조-중 친선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획기적 사변 등) 持續 칭송, 선전(9/7, 평방)
- 김일성 父子 영상 모자이크벽화, 룡하림산사업소·대홍단군 감자연구소·무산군·조양탄광과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 각각 건립(9/8, 중통)
- 정권창건 6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9/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보고), 김영춘, 이용무, 오극렬, 전병호, 최태복, 이영호, 김정각,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김영대, 유미영 등을 비롯한 당과 국가간부들, 우당위원장들 등 참가
- 항일빨치산 출신 '강건' 사망 60돌 중앙추모회,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9/8, 중통)
  - 김영남, 오극렬, 이영호(추모사) 등을 비롯한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등 추모회 참가
- 정권 창건 62돌 즈음 사실을 통해 金父子 혁명위업·선군영도 찬양



과 杓民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을 맞은 올해 김정일의 두리에 일심단결로 △군력강화 △강성대국 건설 △인민생활향상 전환 △조국통일 투쟁 등 주문(9/9, 평방)

나. 경제

● 北, 게임 개발로 외화벌이(9/6, 블룸버그 통신)

- 북한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통신은 북한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합영회사 ‘노소텍’ 경영진의 말을 인용,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와 ‘맨 인 블랙’에 바탕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경기부양에 나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 이들 게임은 특히 ‘오죈(Ojom)’사에서 출시했다가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코프’가 이 개발사를 매입한 뒤 ‘폭스 모바일’이라는 업체로 개편, 관리하고 있음.
- 유럽의 정보기술 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북한이 중국 등 해외기업과 연계해 게임을 개발, 출시하면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프트웨어 개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추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 북한의 게임 개발 및 해외 판매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북한 정부에 돈을 건네는 거래는 모두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반한다”면서 북한이 모바일 기기와 프로그램 개발로 해킹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오죈 계열사를 운영하다 2007년 북한과 함께 노소텍을 창립한 볼커 엘로서 대표는 게임 프로그램과 사이버 첩보활동은 무관하며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 엘로서 대표는 나아가 북한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북한에는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직원을 둔 소프트웨어 업체가 다수 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중앙물리탐사단과 중앙광물자원조사단 및 함경남도탐사관리국 등의 정보과학기술탐사방법을 도입, 검덕지구 등 지질구성과 광물 매장량 탐사성과 등 자랑(9/6, 중통)



#### 다. 사회·문화

##### ● 굽주린 北주민들, 中國경 넘어 ‘월경 절도’(9/8,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굽주림에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이 국경 부근 중국 마을까지 건너가 농작물을 훔치거나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급증, 북·중 양 국간 갈등을 빚고 있음.
- 방송은 함경북도 연사군 주민의 전언을 인용, “적계는 5~6명, 많게는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두만강을 건너간다”면서 “대부분 식량을 훔치려고 국경을 넘지만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밝힘.
-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고사리, 생열귀, 오미자, 룡담초 등의 약초를 중국에 내다팔아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왔는데 이런 현물 거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요즘 북한 땅에는 약초 씨가 거의 말랐다고 방송은 덧붙임.
- 중국 투먼(圖們)의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늘어 비상이 걸렸다”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산림훼손과 농작물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투먼 세관을 통해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이 200명 이상”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투먼교도소에 북한 주민 3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월경 절도가 늘자 연변자치주 공안 당국이 북한 측에 국경질서를 더 엄격히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임.
- 북한 량강도 소식통은 “중국에 들어가 약재용 나무껍질을 벗기다가 제지하는 산림감독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혜산시 주민 6명이 지난 4일 압록강세관을 통해 인도됐다”면서 “조만간 모두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함.
- 이런 사례가 잦아지면서 국경 근처의 중국 주민들은 밭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사냥개를 여러 마리 기르거나 사냥총으로 무장하고 경작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 北주민들, “남한 구호물자 수재민에 도움 안돼”(9/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를 지원해도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함.
- 친척을 방문하려고 보름 전 중국에 왔다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 림주리(가명)씨는 “이곳에서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고서야, 남조선이 수해지원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간부들만 배불리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에 말함.
- 림씨는 “조선(북한)에 있으면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임.

- 5년 전 북한을 빠져나왔다는 장모씨는 “과거 남조선에서 쌀과 비료를 대량 지원했을 때도 직접 혜택받은 주민은 없었고, 지원 물자 일부가 장마당에 흘러나와 팔리는 정도였다”면서 “당시 북한 당국은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두려움을 느낀 남조선이 쌀과 비료를 보내왔다고 선전했다”고 소개
- 그는 “이번에 남조선이 구호물자를 보내도 북조선에서 그대로 보도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쌀의 경우 품질이 좋으면 당과 군 간 부나 일부 외화벌이 식당 등에 공급되고, 중장비와 시멘트는 수해복구 현장이 아니라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현장이나 희천발전소 공장 같은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함.

#### ● 북한 영유아 19%, 설사로 고통(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과 수질 상태가 나빠 5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2명꼴은 수인성 설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을 맞아 RFA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물 공급 상태와 수질이 좋지 않아 설사 환자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5세 이하 영유아 중 19%가 설사를 앓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어 “북한에서 설사가 영유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영유아의 설사병 전염률도 높아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평균 수치인 24%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임.

#### ● 北 ‘신의주 주민, 식량 부족 호소’(9/12, 조선신보)

- 신보는 “(신의주) 현지에서 주민 생활안정에 절실한 식량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연료, 천막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
- 평안북도 큰물피해방지대책 연합지휘부의 책임자 홍정호(46)씨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각 도와 성, 중앙기관에서 보내온 식량과 국제기구들에서 보내온 식료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씨는 “8월30일까지 많은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수해로 집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민들은 안전한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멘트와 목재 등 건설자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피해를 본 수 천여명의 주민들에게 제때에 구호물자가 지급되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소개
- 홍씨는 “복구작업에 쓰이는 흙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복구에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黃南 신천·재령·안악·태탄 등지에서 태풍 7호에 의해 수십채의 살림집-공공건물 등이 파괴, 특히 3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김용구(黃南道 인민총 책임부원)의 피해복구소식 보도(9/6, 평방)
- 태풍9호 ‘말로’의 영향으로 오늘(9/6)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으며 “동서해 중부해상과 내일 동서해 북부해상은 강풍이 예상되니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 당부(9/6, 중방)

## 2. 대외정세

### ○ 홍콩, 역내 對北투자증가사 조사착수(9/8, 자유아시아방송(RFA))

- 홍콩 당국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인 역내 투자증가사의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
- 방송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 5일 경찰과 재정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에 북한 ‘대동신용은행’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피닉스커머셜벤처사(社)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를 지시
- 피닉스커머셜벤처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대북 투자증가 전문회사로 홍콩에도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자금을 추적해온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 국제인권’ 대표는 이 방송에 “대동신용은행의 나머지 지분 30%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거래 결제은행인 ‘조선대성은행’이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홍콩 관리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조사를 촉구했더니 지난 5일 조사하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밝힘.
- 북한의 대동신용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고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올라 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처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금융제재 대상 가운데 하나임.
- RFA는 “홍콩 관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카토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다른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제 금융의 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콩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임.

### ○ 버진아일랜드, 北계좌 ‘돈세탁’ 조사 착수(9/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대풍그룹)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역내 은행에서 불법 무기거래 자금 등을 세탁한 뒤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버진아일랜드 당국이 조사에 착수



- 방송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자금을 추적해온 일본의 인권운동가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는 버진아일랜드 정부에 북한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 지난 7일 버진아일랜드 금융거래위원회의 재클린 윌슨 법집행국장으로부터 "그 같은 의혹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요지의 이메일을 받았음.
- 한편 '데일리NK'는 지난달 3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 "대풍그룹이 버진아일랜드의 퍼스트캐리비언은행에 개설된 '하나홀딩스'란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 무기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함.
- 대풍그룹은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외자유치 창구임.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추가제재 대상에는 대풍그룹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홍콩 금융당국은 역내에서 영업중인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풍그룹과의 거래 내역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브라질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7, 중통)
-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조선관의 날' 행사, 9/6 北 정부대표단(단장: 황학원 도시경영상)·박명호(駐中 北 대사관 공사)·'곽윤총'(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등 참석下 진행(9/8, 중통)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 등, 9/7 北 정권 창건 62돌 즈음 연회 마련(9/8, 중방)
- 駐쿠바 北대사관, 9/3 北 정권 창건 62돌 즈음 연회 마련(9/8, 중방)
- 김영남, 9/7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61돌 생일 관련 축전(9/8, 중통)
- 中 국가 주석 '호금도' 등 黨 및 국가 지도자들, 9/8 김정일·김영남·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北 정권 창건 축전 발송(9/9, 중방·중통)
- 이란·레바논·인도 대통령 등 親北 국가 지도자들과 「총련」등에서 각각 축전 발송(9/9, 중방·평방)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中朝우호협회(회장 : '무동화')의 9/7 최병관(駐中 北 대사) 등 초청下 연회 개최 및 「총련」의 경축연회와 중앙강연회 소식도 보도(9/9, 중통·중방)
- 러시아 대통령 '데. 메드베제브', 김정일에게 정권 창건 축전 발송(9/9, 중통)
- 쿠바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김정일과 김영남에게 축전 발송(9/9, 중통)
- 김영남, 타지키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9, 중통)



### 3. 대남정세

#### ● 北 “남조선 어선, 선원 송환 결정”(9/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승호 선원과 어선을 송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통신은 기사에서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남조선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밝힘.
- 통신은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8월 8일 남조선 어선 ‘55대승호’가 우리측 동해경제수역에 침범해 비법적인 어로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됐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라고 덧붙임.

#### ● 北적십자 “대승호 선원 7일 오후 4시 송환”(9/6, 연합뉴스)

- 북한이 나포한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군사경계선(동해 북방한계선)에서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적십자 채널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통일부는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후 2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하며, “우리 해경이 북측이 언급한 시간인 7일 오후 4시 해당 수역에서 대승호 및 선원들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함.
- 북측이 대승호와 선원들의 송환 장소로 언급한 동해군사경계선은 과거 우리 어선 나포 당시 송환 장소로 이용했던 지점인 것으로 알려짐.
-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과 비슷한 시각에 구체적인 송환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남조선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 발표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 北 “쌀, 중장비, 시멘트 달라”(9/7, 연합뉴스)

- 북측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음.



-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한 데 대한 회답의 성격으로 보임.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에 조선적십자회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도 지원품목과 규모(100억원), 지원경로 등 세부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다시 발송했었음.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 계획에는 북측이 요구해온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의 지원요청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천안함 사태로 꾀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 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9/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0일 대한적십자사측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전함.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유종하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시기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한 좋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밝힘.
- 장 위원장은 이어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북남적십자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함.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보즈워스 방한. 6자회담 촉매제될까>(9/12)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일 저녁 방한했음. 지난 2월말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그의 행보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있기 때문임.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촉매제가 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임.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대화에 기대가 다”며 “한국 정부의 관리들과 만난 후 더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13일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을 예방하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이 자리를 통해 그는 천안함 국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협상과 인사로 거론되는 보즈워스 대표는 일단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의견에 ‘공감’을 피력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아무런 진전’없이 시일을 허비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전언임.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순방 길에 나선 그의 등장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기조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는 기류로 해석하고 있음.
-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북해 핵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그동안 북·미 양자대화과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음. 그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 3월1일에도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동의한다면 6자회담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한국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입장을 적극 조율할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과 북한이 뉴욕 채널을 재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음. 이 경우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기류를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유화적 공세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음. 북한은 지난 7일 대승호 선박과 선원을 우리 측에 송환한데 이어 10일 대한적십자사에 추석을 기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음. 이는 최근 커트 캠벨 미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에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됨.

- 우리 정부도 최근 북측에 쌀을 포함한 북한 수해복구물자 지원을 검토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며 대북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음. 이런 흐름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점차 커짐. 나아가 미국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완화하고 6자회담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6자회담 논의가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음. 또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앞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보면 6자회담 재개 국면이 조성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과제와 변수를 제시하는 쪽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 당국자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정책변화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고 커지면 달라지겠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수개월만에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런 한국을 외면하기 어려운 미국도 적절한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임. 정부 당국자들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힘. 그러나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찾는 보즈워스 대표가 미국과 중국간 ‘G2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6자 재개 계획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한 소식통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찬바람이 부는 올 연말부터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강요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 스타인버그 “北, 비핵화 합의 이행 조짐 보여야”(9/11)

-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조짐(concrete indications)”을 보일 경우 6자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제네바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유의미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재개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북한이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기 위해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구체적인 조짐을 원한다”면서 거듭 회담을



- 위한 회답이 아닌, “의미 있는 진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 국제사회의 감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 북한은 또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참가국들은 이를 존중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나아가 서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인다고 비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훈련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하며 위태롭게” 행동하기 전 재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을 안정시킨다고 주장했다.
  - 또한 미국이 관계 진전의 중요성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 후 대치를 끝내는 것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북한 인사들과도 회담 자체를 위한 회답이 아니라 유의미한 진전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회답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회담을 재개하면 6자회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음.

#### ● <꿈틀거리는 6자회담 재개 흐름>(9/11)

- 천안함 이후 교착국면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을 놓고 날카로운 기싸움을 벌이던 북·미 양국이 점차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대화의 장(場)을 모색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음. 단초는 남북관계임.
-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先)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형국임. 북한이 지난 4일 우리측에 수해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10일 추석을 기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은 이런 흐름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음. 커트 캠벨 미 동아태 차관보가 바로 전날 워싱턴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어 보임.
-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해빙을 매개로 북·미 양국이 서로 대화테이블에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천안함 이후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기조를 이끌어온 한국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듯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미·중을 중심으로 한 6자 내부의 ‘보이지 않는’ 교감과 막후 조율을 거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음. 6자 각국이 회



담재개의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서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이 우다웨이 순방을 통해 한·미·일·러에게 “북한을 설득할테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일 방중을 통해 북한에게는 “남북관계개선을 비롯해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관측임.
- 특히 남북관계를 고리로 한 대화재개 모색은 중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3단계 프로세스 또는 이에 근거한 ‘새로운 제안’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다시 말해 ‘남북관계 개선→북·미접촉→6자 예비회담→본회담’ 수순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 보다 결정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해진 태도가 최근 기류변화의 주된 동인이 되고 있음.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기조의 방침이 아직은 제재 쪽에 가있지만 서서히 대화 쪽으로 이동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 이는 천안함 이후의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최대과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일정조건에서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관여(engagement)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상황인식이 조심스럽게 모아지고 있다는 관측임.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북·미대화과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이 조성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미국의 유연해진 태도 속에서 그간 공조스탠스를 취해 온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남북관계를 적절히 해나가려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10일 러시아에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 “제2 개성공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미·중을 중심으로 6자내부의 변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임.
- 정부는 특히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당초 ▲천안함 사과·반성 ▲선(先)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던 데서 한걸음 물러나 “북한의 전반적 행태를 평가한 이후 회담 재개를 논의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누그러뜨렸음. 이런 맥락에서 12일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은 6자회담 재개의 풍향을 예고하는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 보따리’에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전향적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외교가 일각에서는 현재 북·미간에 뉴욕채널 등을 활용한 비공식 접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추가로 우호적 조치를 취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음.
-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화 재개냐, 제재 유지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한·미 대 북·중’의 대립각은 크게 무너지는 분위기임.



### ● 키신저 “北.이란 핵 집단외교 별 성과 없어”(9/11)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은 일부 국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집단안보 이상이 훼손되는 바람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북한 등에 대한 집단제재 노력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국 이해를 앞세운 국가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에 의해 훼손됐다고 말했음.
- 그는 “유엔의 지지 아래 진행된 10여년 간의 북한 및 이란과의 협상은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킨다는 목표에는 먼발치에도 미치지 못했음. 이는 핵 확산자들이 시간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확산과 제재에 대한 협상은 결과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에 따라 범위를 정하게 됐으며 그런 방식의 집단안보는 스스로를 손상시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음.
- 키신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서방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은 북한 정치의 점진적 진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슬람과 대치했을 때 생겨날 내부의 결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버리라고 압력을 넣는 한편으로 평양에 더 많은 외교 안보적 보장을 제시할 것을 미국 쪽에 요구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또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또 이란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 왔음.
- 키신저는 집단안보보다 개별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강대국들이 새로운 핵보유 국가들이 출현하는 상황을 용인하거나 아니면 핵보유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행동에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음.
- 키신저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을 찾으려면 아프간 주변국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파키스탄, 이란, 중국, 인도 등은 모두 탈레반이 승리하거나 알 카에다가 아프간에서 기반을 갖추는 것을 막는 데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 美 “北 올바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호응”(9/10)

-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대화 가능성에 미국은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그 전제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음.
- 하지만 그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 ▲역내 긴장 완화 ▲한국을 포함



한 이웃국가들과의 건설적인 관계 형성 ▲국제의무 준수 및 9.19 공동성명에 부합하는 긍정적 조치 이행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은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가 고려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대화국면 시작의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우리는 열려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를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북한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며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이달 말 열릴 유엔총회 기간에 “핵심 동맹국들과 (대북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형식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간에 유엔총회 기간에 열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간에 이날 북한문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대북·대이란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이 이끄는 관련부처 대표단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밖에 그는 북한의 당대표자회 개최를 통한 권력승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도 무엇이 공개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말했다.

### ● 캠벨 “北이 먼저 남북 화해조치 보여야”(9/10)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현 상태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조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있는 모든 당사국들에 이런 점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 행정부가 ‘다음 수순’과 관련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깊숙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일본, 중국 순방도 이런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그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승호 억류선원 석방, 한국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등을 통해 남북간에 일종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캠벨 차관보가 거듭 북한의 선(先) 화해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으로 풀이됨.

- 캠벨 차관보는 북한 권력승계 문제와 연결돼 주목을 끌고 있는 조선노동당 대표자 대회와 관련, 이번 대회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솔직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 클린턴 “北후계 누가되든 비핵화가 목표”(9/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 비핵화가 그들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게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더불어 북한에 비핵화의 장점을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또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제공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에 관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과 밀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강화 문제에 언급, “우리(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긴밀한 동맹과의 유대를 재확인했으며,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 분야에서는 APEC(아·태경제협력체)과의 관계를 넓혀왔으며, 더 큰 규모의 경제통합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9.11 테러 9주년에 맞춰 이슬람 경전 코란을 소각하려는 플로리다주 한 작은 교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은 미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고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 “제재와 압박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레버리지”라고 밝혀 이란과 협상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결국 안보분야의 정책시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北요청’-보즈워스 순방..6자회담 탄력받을까>(9/8)

- 북한의 쌀 지원 요청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동아시아 순방 등 6자회담의 재개를 둘러싼 정세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양상임. 특히 의장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해온 터여서 예상보다 빠른 6자회담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일단 남북의 움직임이 주목됨. 북한은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에 쌀을 포함한 수해복구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음.

-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우고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됨. 그동안 6자회담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던 만큼 6자회담이 복원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임.
- 무엇보다도 북한의 행보가 관심거리임. 남북관계가 반전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북한은 6자회담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지만 이달 후계체제 등을 위한 당대표자회를 마친 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내건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북한의 유화적 태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조짐과 맞물려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음.
-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했던 한국과 미국 대 북한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화해국면으로 조금씩 변화될 조짐임.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미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간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 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내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보즈워스 대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변화조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보즈워스 특별대표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음.
- 그러나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 우세함.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최근 한·일·미 3국을 방문해 북미 접촉부터 시작하는 6자회담 3단계 재개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임. 더구나 천안함 사건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의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논의는 어떤 형식이든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임.

-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행보를 도모하는 쪽으로 움직일 경우 상황의 변화 가능성은 상존하는 국면임. 이런 가운데 이달 하순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모이는 유엔총회가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 中 우다웨이, 러시아 방문(9/7)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유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길 공통적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이 국면을 전환해 6자회담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6일 모스크바발 기사를 통해 우 특별대표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이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화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특별대표는 지난 달 중순 북한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방문함으로써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을 모두 마친 뒤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 나. 미·북 관계

##### ● 美북부사령관 “北미사일, 요격 자신”(9/10)

- 제임스 위니펠트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관은 9일 만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이를 격추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성조지에 따르면 위니펠트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담당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만일 이 자리에서 북한 혹은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격추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답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위니펠트 사령관은 “미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들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의도가 없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테러단체들도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러시아는 능력은 있지만 의도는 없는 반면, 이란·북한은 의도를 보여왔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능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음.

- 위니펠트 사령관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테러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임을 들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북부사령관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런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만일 핵공격이 일어난다면 이는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핵공격에) 대비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위니펠트 사령관은 지난 5월 중순 현재의 사령관에 취임했음.

#### ●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北 만일의 사태 대비”(9/9)

-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패트릭 월쉬 제독은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 승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월쉬 제독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과거 권력 승계 시기에도 북한이 “도발”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음.
- 그는 거듭 북한의 권력 승계 시기는 “역사가 보여주듯 불안정한 때”라면서 “우리는 이에 경계 태세를 취하고 어떤 종류의 사건에도 대비할 병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쉬 제독은 또한 미 해군이 천안함 사태 후 북한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미 태평양함대는 하와이 진주만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제3함대와 제7함대를 보유하고 태평양 잠수함대, 주한·주일 미 해군 등을 통제하고 있음.

#### ● 美의약품 수송 화물기 北도착(9/8)

-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에 전달할 미국의 구호 의약품을 실은 화물기가 지난 2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미 국무부가 7일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인도적 물품을 실은 화물기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약 7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이 미국의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와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머시코’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 정부가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 구매 자금으로 75만달러를 지출키로 했으며, 이들 자금이 3개 대북 민간구호단체에 균등히 배분됐다고 이



달 초 밝힌 바 있음.

#### 다. 중·북 관계

##### ● 후진타오, 北정권수립 축전·‘북중관계 발전’ 강조(9/9)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북한정권수립 62주년 축전에서 “조선측과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으로 각 영역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고 중조관계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주석은 또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하고 키워주신 중조친선은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됐다”고 강조했다.
- 이 축전은 후 주석 외에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연명으로 작성됐고, 북한 쪽 ‘받는 사람’에도 김 위원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 또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북우호협회는 지난 7일 최병관 주중 북한대사 등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축하 연회를 열었다. 북한 대사를 지낸 우동허(武東和) 중조우호협회장은 연설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반년도 못되는 사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 당, 두 나라 정부가 중조 친선을 얼마나 중시하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고, 최병관 대사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측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 ● “北, 중국 믿지 않아” <美전문가>(9/9)

- 북한은 중국을 믿지 않으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권력승계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관측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드로윌슨국제센터에서 북한 국제문서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맡은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8일 ‘북한 알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오해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이나 레버리지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을 오해의 첫 번째 예로 들면서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슨 연구원은 중국이 1980년대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의 권력승계에 반대했고, 북한이 어느 곳보다도 주권의식이 강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북한이 중국에 권력승계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의 최근 중국 방문이 권력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 서대숙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20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리며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력승계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간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가 지명되어야 하며, 김정일보다 젊은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등을 북한 주민들이 후계 문제와 관련해 얘기한다고 소개했음.
-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뒷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상황, 역사적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북한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한편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그동안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던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도 한국 정부 주도의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의문을 거듭 제기했음.

○ “**굶주린 北주민들, 中國경 넘어 ‘월경 절도’<RFA>(9/8)**

- 최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이 국경 부근 중국 마을까지 건너가 농작물을 훔치거나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급증, 북중 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이 방송은 함경북도 연사군 주민의 전언을 인용, “적게는 5~6명, 많게는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두만강을 건너간다”면서 “대부분 식량을 훔치려고 국경을 넘지만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고사리, 생열귀, 오미자, 룡담초 등의 약초를 중국에 내다팔아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왔는데 이런 현물 거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요즘 북한 땅에는 약초 씨가 거의 말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중국 투먼(圖們)의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늘어 비상이 걸렸다”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산림훼손과 농작물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투먼 세관을 통해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이 2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투먼교도소에 북한 주민 3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월경 절도가 늘자 연변자치주 공안 당국이 북한 측에 국경질서를 더 엄격히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량강도 소식통은 “중국에 들어가 약재용 나무껍질을 벗기다가 제지하는 산림감독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혜산시 주민 6명이 지난 4일 압록강세관을 통해 인도됐다”면서 “조만간 모두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잦아지면서 국경 근처의 중국 주민들은 밭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사냥개를 여러 마리 기르거나 사냥총으로 무장하고 경작지 주변



을 지키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 ● 中 “北 권력세습 문제는 내정”(9/7)

- 중국 정부는 북한의 권력 세습문제와 관련, “완전히 북한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기자가 제기한 사안은 완전히 북한 내부의 일(사무)”이라고 대답했음. 장 대변인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세습에 대해 중국은 반대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들어 2차례의 방중에서 삼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문제를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 측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방중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 중국 측 지도부에게 그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장 대변인의 발언은 사회주의 제도의 원칙으로 보면 세습은 반대해야 하지만 북한의 상황을 타국의 내정으로 돌려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됨.
- 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만간 개최될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 회의에 관해 북한이 중국에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 <中언론, 김정일 방중보도 경제시찰에 방점>(9/7)

- 중국 언론이 지난달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발자취를 보도하면서 동북 3성의 경제발전 시찰에 초점을 맞췄음.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6일 지난달 26~30일 5일간 진행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장문의 기사로 게재하면서 지린시와 창춘시, 하얼빈의 경제발전 상황 시찰을 크게 부각시킨 것임.
- 신문은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시에는 광저우, 선전, 상하이 등 개혁 개방을 주도한 연해 지역을 둘러보고 천지개벽의 변화를 체험한 데 반해 올해 2번의 방중에서는 북한과 인접하고 환경이 비슷한 동북 3성의 중공업, 제조업 기지의 발전상황을 중점적으로 시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초에는 동북3성 중 랴오닝(遼寧)성을 집중 관찰한 데 이어 이번 방중에서는 지린성의 지린시와 창춘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의 기계제조공장, 궤도교통 산업, 화학공업, 식품가공, 농업기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음. 이곳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방의 진흥계획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곳임.
- 김 위원장은 “동북 지방은 북한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동북지방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방법과 경험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한 북한 문제 전



- 문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한 뒤 “북한의 향후 개혁노선은 중국의 연해지역의 비약적인 발전 방식이 아니라 북한 나름의 지역특색이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신문은 이번 방중에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은이 동행했다는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 기자가 지린시 위원(毓文)중학교에 삼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를 취재한 결과 학교 책임자는 “상부의 지시로 취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매년 20여차례 북한 방문단을 맞이하지만 이번 방문단이 가장 높은 급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는 것임.
- 신문은 방중이 끝난 뒤 방송된 TV화면에 김정은이 잡히지 않은 이유로 “사진이나 영상에 포함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거나 잡혔더라도 외신들이 현재 얼굴을 잘 몰랐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이 동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을 내놨음. 그러면서 항일 투쟁을 한 아버지 김일성의 행적을 찾는 ‘뿌리찾기’ 여행과 중국 지도부에 후계자를 소개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는 외신들의 분석 내용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 소개했음.
  - 신문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 불변,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 ● “北비핵화 中 협력 기대 말아야” <고든 창>(9/7)

- 중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음.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의 몰락’ 저자인 고든 창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손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창 변호사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양국의 유대관계가 다소 약화했고, 중국의 젊은 관리들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최고 지도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변경하려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 더욱이 중국 내 강경파 군 장성이 최근 득세함에 따라 북한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추세라고 창 변호사는 진단했음. 그는 또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해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해 남한에 흡수되는 상황을 극히 꺼린다고 말했음. 아울러 중국 측은 ‘김씨 왕조’가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 권좌를 물려주려는 계획에 적극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해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중 열린다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직책을 맡을지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가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할지, 군부의 조종을 받



는 꼭두각시 지도자가 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라고 분석했음. FT는 이어 북한의 후계구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도 대다수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세운 2012년까지는 후계자를 공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 “中, 조선인 투쟁 ‘항일투쟁사’로 인정”(9/6)

- 일제 침략에 맞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손잡고 만주 일대에서 벌였던 6년간의 항일투쟁이 중국의 ‘항일투쟁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홍콩강신문이 6일 보도했음.
- 신문은 “리민(李閔.86) 전 헤이룽장(黑龍江)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30여년간 일관되게 내세운 ‘항일투쟁 역사는 8년이 아니라 14년’이라는 주장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최근 인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중국의 해방군보(解放軍報)가 지난달 20일 항일전쟁 승리 65주년을 조명하면서 ‘14년의 항일투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 2일 “14년 동안 전 민족이 참여한 항일전쟁은... 중국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보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국은 그동안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일제가 패배해 물러간 1945년까지를 공산당의 항일투쟁사로 규정, ‘8년 항일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음. 이에 따라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직후 ‘동북항일연군(聯軍)’을 공동으로 조직, 만주 일대를 누비며 6년간 일제에 항거했던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사에서 제외돼왔음. 고(故) 천레이(陳雷) 전 헤이룽장성장의 부인으로, 만주사변 발발 직후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해 항일투쟁에 나섰던 리 전 부주석은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이 당의 주력군이었던 신사군(新四軍)과 팔로군(八路軍)의 항일투쟁에만 초점을 맞추자 동북항일연군의 투쟁도 항일투쟁사에 반영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중국 관영 매체가 ‘14년의 항일투쟁’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리 전 부주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사에 포함됐음을 의미한다고 홍콩강신문은 분석했음. 동북항일연군은 일제 침략에 맞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과 중국의 항일 세력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항일 무장단체로, 헤이룽장과 지린 등 동북지방에서 활약했음. 김일성 전 주석 등 북한 정권 수립 주도 세력들도 동북항일연군에서 활약했고 천 전 헤이룽장 성장과 리 전 부주석 부부는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김 주석과도 두터운 교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천 전 성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김 위원장도 천 전 성장이 2002년 병석에 눕자 해마다 새해 선물을 보내고 2006년 그가 89세의 일기로 사망하자 조문을 전달, 애도를 표했음.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의 김



주석 항일 유적지를 돌아본 것도 천 전 성장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라. 일·북 관계

##### ● 日 “北 핵물질 압수 ‘비핵3원칙’ 위반 아냐”(9/8)

- 일본이 북한의 선박을 뒤져 핵무기를 압수한 뒤 자국으로 가져가더라도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8일 일본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일본이 이같은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때문임. 일본은 이 법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이 실려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공해상을 향해 중인 외국 선박이라도 선적국의 동의 아래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핵무기가 발견됐을 경우 일본으로 가져가면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핵물질을) 압수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영역 안에 일시적으로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까지 비핵3원칙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음.
- 이같은 일본 정부 입장은 법안 논의 단계에서 국회 질문 예상 답변 자료로 작성된 것을 민간 연구모임인 ‘군사문제연구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최근 공개됐음. 신문은 “정부가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예상 답변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비핵3원칙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비핵3원칙이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을 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음.

#### 마. 기 타

##### ● 재영 탈북자들, 北-英 수교 10주년 규탄(9/8)

-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8일 북한 정권 창건과 북-영 수교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영 북한대사관의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음. 재영 조선인총연합회 소속 탈북자 10여 명은 이날 낮 12시(현지시간)께 런던에 있는 주영북한대사관 앞에 모여 “북한 독재정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민주주의 요람이라는 영국이 북한 정권 창건일을 축하한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북한대사관은 이날 자국에 주재했던 영국 외교관 등 ‘친북 인사’ 30여 명을 초청해 수교 10주년과 북한정권 수립 62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를 열었음. 북한대사관은 런던 서쪽에 위치한 가정 집을 개조해 공관 겸 관저로 쓰고 있으며 평상시 인공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인공기를 내걸고 ‘친북인사’들을 맞았음.
- 탈북자들은 피켓을 든 채 “북한 주민들을 고통과 억압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독재자 김정일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즉각 채택하고 정치범수용소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집회에는 미얀마 인권단체 회원도 참석해 북한과 미얀마의 불법 무기 거래 중단 등을 촉구했음.

-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2000년 10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감안해 북한과의 수교방침을 발표한 뒤 수교했음. 영국은 2001년 7월 북한에 상주 대사관을 열었으며 북한은 2003년 4월 상주 대사관을 개설했음. 유럽지역에는 영국 350명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등에 모두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정착해 있으며 이들은 최근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를 구성했음.

### ● “홍콩, 역내 對北투자중개사 조사착수” <RFA>(9/8)

- 홍콩 당국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인 역내 투자중개사의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밝혔음. 이 방송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 5일 경찰과 재정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에 북한 ‘대동신용은행’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피닉스커머셜벤처사(社)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를 지시했음. 피닉스커머셜벤처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대북 투자중개 전문회사로 홍콩에도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자금을 추적해온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 국제인권’ 대표는 이 방송에 “대동신용은행의 나머지 지분 30%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거래 결제은행인 ‘조선대성은행’이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홍콩 관리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조사를 촉구했더니 지난 5일 조사하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밝혔음.
- 북한의 대동신용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고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올라 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처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금융제재 대상 가운데 하나임. RFA는 “홍콩 관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카토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다른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제금융의 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콩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생활은 미스터리” <르피가로>(9/7)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생활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음. 르피가로는 ‘미스터리’에 싸인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생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이 90년대 말 스위스의 연방주의를 경험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사실 그의 유학내용은 민



지 못할 만큼 비밀에 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의 유학 생활을 취재한 스위스 ‘렘도’라는 잡지의 줄리 차우크 기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이 아마 베른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다녔던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 차우크 기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스위스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불과 몇 m 거리에 위치한 킴링겐 국제학교에 ‘박철’이라는 가명으로 등록해 운전기사의 아들 행세를 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왕철’이라고 불리던 학생이 항상 그와 동행했으나, 이 때문에 급우들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아야 했음. 또 베르너 차이퉁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1998년부터 베른 인근의 리베펠트 정치학교에 다니면서 ‘박은’이라는 가명을 썼으며 한 급우에게 자신이 ‘조선 왕의 아들’임을 고백한 적도 있었음. 베르너 차이퉁은 김정은이 평소 수영과 농구, 스포츠카, 장클로드 반담의 영화를 좋아할 정도로 비슷한 또래 소년들을 닮았던 것 같았다면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영어와 기초불어, 독일어, 베른 지방 방언을 배웠지만 김정일 위원장처럼 풍뎉(스위스 전통 음식)를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스위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 TV의 론 호출리 기자는 확실한 것은 이 철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가 김정은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대사로 30년동안 제네바와 베른에 체류하다 지난 4월 본국으로 돌아간 75세의 이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 자녀들의 진정한 후견인이었다고 말했다. 호출리 기자는 “이 대사가 리무진을 타고 베른으로 김정은을 찾으러 오곤 했는데 이 대사는 소년 김정은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면서 “이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며 아마도 권력 승계에서 김정은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정했음.
- 북한 외교관들을 위해 몇차례 세미나를 주도했던 제네바대학 폴린 플라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세 아들과 딸 1명이 스위스에서 거주했으며 작은 두 아들의 모친도 제네바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의 일원으로 잠시 제네바에 거주했었다고 말했다. 플라냐 교수는 “장남(김정남)은 디즈니랜드를 가려다 일본에서 체포된 이후 후계자 후보에서 밀려났고, 차남(김정철)은 미국의 록콘서트에 자주 참석하는 등 정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3남 김정은에 대해 ‘아주 신중한 소년’으로 묘사했음.
- 스위스 외교부의 카롤 왈터 대변인은 중립국가인 스위스는 1953년부터 남-북한을 분단하고 있는 휴전선에 남아 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청년대장’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의 교육을 위해 산악국가 스위스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 1974년부터 평양과 외교관계를 맺어온 스위스는 1997년 세계 최초로 북한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했음. 론 호출리 기자는 “우리는 북한이 스위스에서 대체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이 북한과 관련된 20억달러가



넘는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씨 일가가 레만 호 주변과 인터라켄 정상에서 가족회의를 자주 갖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커크 USTR대표, LA서 ‘한미FTA’ 의견 수렴>(9/10)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이 지역 한인사회와 미 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음. 커크 대표는 이날 다이앤 왓슨(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주최한 조찬모임에 참석한 데 이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과 한미 업계 대표들이 모인 LA시청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음.
- 커크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만나 FTA 비준에 대해 진전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국 측 파트너들과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그는 ‘한미 FTA에서 어떤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미 전역을 돌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LA지역에서도 한미 업계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유익한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 이날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김재수 LA 총영사와 김춘식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 지역 미국 재계 인사와 한국기업 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음.

#### ● 美국무부 “한국 對이란제재 환영”(9/9)

- 미국 국무부는 8일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對) 이란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결정이 이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welcome)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이란 핵활동의 성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 또 크롤리 차관보는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 1929호의 전면적인 이행과 미국, 일본, 한국에서 발표된 국가적 차원의 조치 등과 같은 결



연한 행동이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테이블로 나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당장 이란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대회와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짐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 美, 올해 對韓 농산물수출 50억달러 예상(9/6)

- 미국 농무부가 올해 회계연도(2009년 10월~ 2010년 9월)에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의 농산물이 작년 회계연도에 비해 30% 이상 늘어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최근 발표한 ‘미국 농업무역 전망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에서 올해 회계연도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 규모를 지난 5월 예상했던 44억달러보다 6억달러 증가한 50억달러로 올려잡았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량 38억2천만달러보다 30.9%나 증가한 것임.
- 농무부는 지난 2월에 올해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량을 41억달러로 예상했다가 5월에 44억달러로 상향조정한 뒤 이번에 다시 6억 달러 더 올려잡았다. 농무부는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 2011년 9월)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규모도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농무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배경으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 농산물 가격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의 수출 경쟁력 감소 등을 꼽았다. 농무부는 한국의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며 2011년에는 4%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농무부는 올해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이 1천7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의 964억달러에 비해 111억달러(11.5%) 증가한 것임. 농무부는 또 2011 회계연도 농산물 수출 규모는 1천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음.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2006년 686억달러, 2007년 822억달러, 2008년 1천153억달러, 2009년 964억달러 등을 기록했다.

## 나. 한·중 관계

### ● 中, 한국의 이란 제재방안에 반대(9/9)

- 중국은 한국이 8일 발표한 대(對)이란 제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우리는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유관 당사국들이 외교적 해결이란 큰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의 유효한 해결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음.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이란에서 900만t의 석유를 수입하는 등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전날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가 없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를 내렸음.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단행한 독자제재 조치와 관련, 중국 기업의 이란내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조 리버맨(무소속, 코네티컷) 미국 상원의원은 8일 한국 정부가 단행한 대이란 독자제재 조치의 틈새를 활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의 이란 내 시장 확대를 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 <中창춘 박람회서 ‘뒷전’으로 밀린 한국>(9/6)

- 지난 2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막, 6일 폐막한 제6회 동북아 무역박람회에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는 푸대접을 받았음. 6일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한국 기업 전시 부스 대부분을 B전시관 2층에 배치했음.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곳으로, 홍보 효과가 작다며 1층 배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음. 1994년 지린성과 자매결연, 16년째 교류해온 강원도의 전시관이나 강원도가 모집해 참가한 향토 기업들도 예외 없이 2층에 전시 부스를 꾸려야 했음. 일부 기업들이 ‘참가 보이콧’을 무기로 압박했지만 주최 측은 “참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모두 70여 개.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지만 ‘까스명수’로 유명한 삼성제약을 비롯해 한국에서 인정받는 알짜배기 중견 기업들로, 다른 외국 기업들에 견주어 실력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음. 반면 지난 7월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는 등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대만 기업이나 일본의 기초 자치단체 및 중소기업들은 G전시관과 H전시관 1층을 차지했음. 이들 전시관은 도로변에서 가까워 관람객들의 접근이 용이해 7개 전시관 가운데 최고의 ‘명당’으로 꼽혔음. 담배와 술, 약재가 주종을 이룬 북한 부스도 G전시관 1층 중앙 통로에 자리를 잡았음. 일본의 자동차업체인 도요타 부스와 마주하는 ‘요지’였음.
- 한국에 대한 ‘홀대’는 부스 배치뿐만이 아니었음. 북한이 이번 박람회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했음에도 중국 측



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음. 지난 2일 개막식 직후 열린 ‘동북아경제무역 협력 고위층 토론회’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은 “미국의 무책임하고 투기적인 금융관리가 세계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 동북아를 전쟁 위협으로 몰아넣고 침예한 군사적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고 미국과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음.

- 동북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지는 취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의 성격과 동떨어진 발언일 뿐 아니라 함께 참가한 한국 등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분명했음.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 배포한 토론회 홍보 책자에 그의 발언 내용을 고스란히 게재했음. 구 부상의 뒤를 이어 연설에 나선 한국 측 대표 김경식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문제를 놓고 참가국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지만 사후 대응에 불과했음.
- 중국은 지난 3일 이뤄진 한국 대표단의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 면담도 하루 전인 지난 2일 밤늦게까지 성사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아 한국 측이 애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람회 참가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초기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바뀌더니 올해는 철저하게 뒷전으로 밀린다는 느낌”이라며 “중국이 한국기업에 큰 매력을 못 느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동북지역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긴 하지만 이런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참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 또 다른 기업인은 “더는 한국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며 “천안함 사태와 서해안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한·중 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올해는 ‘외풍’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 韓中, 28일 FTA 민감분야 사전협의(9/6)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앞두고 오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정책 국장과 위젠화(俞建華)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사장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FTA 산관학 합동연구 제2차회의에서 만나 사전협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음. 이번 협의는 양국이 지난 5월 28일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임.
- 대사관 관계자는 “공동 연구 종료 이후 처음 시작되는 사전협의를 몇차례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감한 분야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뒤에야 정식협상



돌입 여부가 결정되며 의견조율이 이뤄지더라도 국내에서 공청회 등 각종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다. 한·일 관계

##### ● 日, 독도영유권 주장 한국 반발에 ‘모르쇠’(9/11)

- 한국이 일본의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데 대해 반발했지만, 일본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10일 회견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표현은 지난해(의 백서)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1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같은 날 회견에서 방위백서 문제에 관해 “일한(한일)관계의 축은 다케시마 기술(記述)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일미(미일)동맹의 심화와 일한관계의 강화라고 하는 선은 한국도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큰 문제 없으리라는 반응을 보였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서울발로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이 이번 일에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연합시론> ‘독도 해결없이 한일관계 미래 없다’(9/10)

- 일본 정부가 10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영유권을 거듭 주장했다. 작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처음 나온 이번 방위백서는 일본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시기적 민감성과 외교마찰 등을 우려해 7월30일로 예정했던 방위백서 발표를 연기했을 때 우리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음. 하지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접근으로는 결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임.
- 더욱이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심경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한달 전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일본의 ‘망각’과 ‘망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렵게 내민 선의와 화해의 손길을 ‘가해자’가 뿌리친 처사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음.
- 외교부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땅’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임. 일본이 터무니없고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할수록 한국 국민들의 뇌리에는 일제의 만행이 자동반사처럼 새롭게 각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몫임.
-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과거사 청산의 본질이자 핵심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접근 방식에 기인한다는 역설이 가능함.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임.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임.
- 이처럼 왜곡된 논리와 근거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그릇된 역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줌. 실례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했음.
- 또한 올해 3월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으면서 교과서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도록 했음. 이는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히 사죄한다면서도 강제병합의 강제성과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고 한·일 과거사 청산의 상징인 독도에 관해서는 자기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교육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음. 일본 정부의 과거사 접근방식을 놓고 항상 ‘진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임. 방위백서를 통해 6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병합 100년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함.

#### ● <日방위백서, 한·일관계 영향은>(9/10)

- 일본 정부가 10일 발간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했음.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매년 등장해온 『일본 고유의 영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 팀이 교체될 경우 한·일 우호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간 총리가 강제병합 담화에서 발표한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후속조치들이 당면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당권경쟁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일본 정치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한·일관계가 미묘한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임.

### ● 정부 “日방위백서 ‘독도주장’ 철회해야”(9/10)

- 정부는 10일 일본이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음.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음.
-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의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변인 논평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평가됨.
- 외교부는 일본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로 논란이 컸던 2008년에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논평을 아예 내지 않았음.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동북아시아국 차원에서 낸 논평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독도 문제에 과민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했음. 국방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음.

### ● 韓日, 16일 도쿄서 첫 국장급 FTA 협의(9/6)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국장급 협의회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음. 이번 협의회에 한국측에서는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야기 타케시 외무성 경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한일 양국은 그동안 심의관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여왔으나 지난 5월 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수석대표 직급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이번에 처음 국장급 협의회를 갖게 된 것임.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달 마지막 주



에 중국과 FTA 민감분야에 대한 정부간 첫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세한 일정은 금주 중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라. 미·중 관계

### ● 미국방부, 항모 조지워싱턴호 서해훈련 확인 (9/10)

- 미국 국방부는 9일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 방침을 재 확인했음.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침 등과 관련해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지 워싱턴호는 정말 서해에서 다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상태”라면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공해에서 하듯이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서 작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음.
- 그는 “그것(조지 워싱턴호의 서해훈련)은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공해에서 작전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밝혔음.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은 10월 중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원자바오, 유엔총회 참석해 오바마와 회담”(9/9)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음. SCMP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원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경기회복을 돕고자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원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은 중국과 미국이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의 방중을 계기로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8일 미국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에 아직 불안정요인이 많고 전 세계적인 각종 도전이 날로 돌출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면적인 관계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음.
- 원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7월까지 양국간 무역에서 미국은 964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는 금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상태임. 원 총리는 회담에서 또 미국의 첨단 IT제품과 장비들의 수입을 대폭 늘리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원 총리는 유엔창립 65주년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후 주석을 대신해 참석할 예정이다.

### ● 원자바오 “중미관계 흐름은 대화.협력”(9/8)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7일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정부 홍보사이트인 중국정부망이 8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이날 중남해 자광각에서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21세기에 적극 협력하고 전면적인 중미관계를 건설하자는 것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확립한 전략방향으로, 서로 근본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진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현재 중미관계의 흐름은 대화와 협력이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정치적으로 신뢰가 깊어져야 하며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될뿐더러 ‘호적수’로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급선무는 금융위기가 가져온 곤란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미 양국은 유관문제를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양국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서머스 위원장과 도널런 부보좌관은 “미중 양국은 최근 몇년새 여러가지 중대한 문제에서 양호한 협력을 해왔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중관계를 매우 중시할 뿐더러 공동이익이 광범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세계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 협력하는 미중관계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표단은 3박4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홍콩의 봉황TV는 이날 서머스 위원장과 도널런 부보좌관의 이번 방중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내년초 방미를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 ● 中, 미 대표단에 “상호협력” 강조 (9/7)

- 중국은 수개월여 미국과의 갈등 끝에 시작된 6일 고위급 경제·외교·안보대화에서 상호 협력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는데 주력했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닌저우(釣魚臺)에서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미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
- 왕 부총리는 특히 “중국내 외국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중 양국은 경제·무역·투자·금융·신에너지·사회간접시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이 7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양국관계를 지속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경제위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굴곡이 많은 만큼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하며 중국은 좀 더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챙기고 있다는 미국내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미측 대표단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임.
- 이에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소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방중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와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후 주석은 올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하려했으나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위안화 환율 문제, 천안함 사태이후 동·서해에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미뤄져왔으며 내년 초 방미를 목표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무역적자 해소와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번 방중 미 대표단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대표단은 왕 부총리와의 만남에 앞서 양제츠 외교부장과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을 접견했다. 미 대표단은 7일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측 대표단과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을 방문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6일 회동하고 “21세기에 미중 양국이 적극 협력하는 것은 시대 진보를 위해 필연적인 일”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정신을 토대로 의견차이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공동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터 전 미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수교이후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양국관계의 앞날에 신심이 가득하다”며 “양국 국민 간에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카터, 원자바오와 中-美 관계 논의(9/6)

- 역사적인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끌어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6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동을 갖고



31년전의 수교 당시를 회고하며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음.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중국어판인 중국일보(中國日報)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31년전의 카터 전 대통령과 덩샤오핑(鄧小平) 선생이 정치가로서 용기와 패기 있게 중·미 수교를 결정하셨다”면서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음.

- 원 총리는 “수교 31년간 양국 관계는 비바람 속에서도 총체적으로 전향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음.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중 수교란 역사적인 일을 이끌어낸 주인공으로서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관측됨.
- 카터 전 대통령은 1971년 ‘핑퐁 외교’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1972년 방중,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간의 1975년 정상회담 등 수교를 위한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인물로 1978년 12월 16일 지미 카터 정부와 중국은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 이듬해 1월1일을 기해 양국이 대사급 공식외교관계 수립을 천명한 바 있음. 수교 직후인 1979년 1월말 덩샤오핑 당시 부총리가 중국 고위급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카터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상호 총영사관 설립에 합의했음.
- 카터의 이번 방중은 최근 8개월여간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데다 미·중 수교를 마무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994년 대북 특사로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최근 다시 방북,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원 총리와 회동에서 6자회담 및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초청으로 방중한 카터 전 대통령은 5일 중국에 도착, 10일까지 6일간 머물면서 상하이 엑스포를 참관하고 후난(湖南)도 방문할 예정임.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와 제4회 중국즈장(芷江)국제평화문화제에도 참석할 예정임.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인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만나 북·미관계와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우리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 <美中, 대립에서 화해로 가나>(9/6)

-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여 갈등과 대립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와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외견상 중국이 먼저 화해의 사절을 먼저 보낸데 이어 미국이 화답하는 양상임. 중국이 지난달 26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지난 1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보내 수뇌부의 ‘의중’을 전하자 이번에



는 미국이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정식으로 보낸 것임. 올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이어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태 이후 촉발된 군사 대치로 미중 간에는 수개월여 갈등이 고조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군사 교류가 중단됐고 외교·안보 라인의 접촉도 뜸했던 게 사실임.

-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하순 미중 간에 제2차 전략경제대화가 열려 핵심사안인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과 중국의 시장지위 인정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태와 이란 핵문제가 논의됐으나 큰 이견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했음. 당시 미측의 주요 인사였던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도널런 국가안보부보좌관의 이번 방중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
- 그러나 미중 양국이 이런 거물들의 상호방문에도 불구하고 일정 공개를 꺼리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아직은 서로 ‘탐색’하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그간 미뤄져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가 내년 초로 예상되며 미 대표단의 이번 방중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접협의 차원의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다른 소식통은 “미국의 방중 대표단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미중 대화에서 교류가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서머스 위원장과 도널런 부보좌관은 8일까지 베이징(北京)에 머물면서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개별 접촉하고, 필요할 경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접견할 가능성이 커 보임. 초점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경제참모로 직선적이고 터프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머스 위원장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왕치산 부총리가 어떻게 반응할 지와 도널런 부보좌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 간의 외교·안보 분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모아지고 있음.
-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5일자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서머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반드시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중국 측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 이로 미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측이 미중대화에서 기존의 위안화 환율절상 압박이라는 최선의 카드를 들이밀겠지만 성과물을 얻기 위한 ‘차선의 카드’도 준비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실제 미 의회 등이 중국의 환율 관행이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라며 이와 관련한 강경책을 주문해왔지만 미 상무부가 지난달 31일 그런 주장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나설 만한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게 미중 대화에서 차선의 카드 도출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위안화 환율 절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국 제조업 경쟁력이 급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껴온 중국은 그동안 외부의 환율 압박에 ‘각개격파’ 전략으로 대응해왔음. 미국에는 대(對) 중국 수출의 문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음. 따라서 이번 미중 대화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을 더 강화하는 개선책을 내놓고 미국의 반응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의 실무사령탑으로 불리는 다이 국무위원이 최근 미국의 잇단 ‘강공’을 누그러뜨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내에서는 근래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동서해 군사훈련,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미-베트남 합동군사훈련이라는 초대형 안보 악재가 잇따르자 미국과의 안보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하고 있음. 다이 국무위원도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강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임. 다이 국무위원은 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막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지난 수개월여 지속된 미중 외교안보 갈등 국면을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과 함께 북핵 6자회담 재개로 풀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으며 다이 국무위원도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됨. 중국내에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북핵 6자회담이 다시 열리면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동북아 주요국가들이 회담장에서 머리를 맞대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을 주문하고 있음.
  - 일단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려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북미접촉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그러나 미국 내에서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보다는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기존의 강경일변도 외교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양측이 이번 미중대화를 통해 기존 갈등과 대립 국면을 대화와 화해 국면으로 급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특히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를 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마. 중·일 관계

##### ● 中, ‘日에 항의’ 동중국해 협상 전격 연기(9/11)

- 중국 정부가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에서 이달 중순



- 으로 예정된 양국간 동중국해 협상을 전격 연기했음.
- 중국 정부는 11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올려 “중국은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이번 결정은 일본 법원이 10일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선장 잔치승(詹其雄.41)에 대해 10일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나온 것임.
  - 중국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음. 장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의 수차례의 엄중한 교섭과 강력한 반대에도 중국 선장에 대해 소위 사법절차를 밟는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함께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음. 그는 “다오위다오와 부속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과 기본적인 국제적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황당하고 불법적이며 무효한 조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음.
  -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스스로 저지른 죄과를 치를 것”이라고 외교적 표현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경고를 했음.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외교부장과 쑹타오 부부장, 후정웨이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고위 간부들이 4일새 3번씩이나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 중국 어선과 어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
  -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7일 센가쿠 열도의 구바지마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위법조업을 발견, 순시선 2척이 접촉해 경고했으나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자 나포했다고 밝혔으며 국내법에 근거해 구속 및 재판 절차를 밟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외국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는 등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예정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행사를 전격 취소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보복을 해 왔음. 올해 초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한 미국에 항의하는 뜻에서 군사교류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군사교류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음. 이런 관례로 볼 때 중일 관계는 이미 급격히 냉각됐으며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임.
  - 한편 이 사건 직후 일본 정부가 8일에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을 이유로 대만 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일본 간의 갈등은 중화권과 일본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음.
- **다오위다오 갈등 중화권으로 확산(9/10)**
-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데 이어 8일에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을 이유로 대만 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확인돼 갈등이 중국-일본에서 중화권-일본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일본측에 나포된 대만어선은 신더이(新德益) 186호와 평릉(豐榮)



106호로 이날 오후 일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북쪽 104해리, 이즈(伊豆)제도 서북방 45해리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순시선은 두 척의 대만어선에 불법어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요코하마 등지로 나포했으며 룡평 106호는 9일 풀어졌으나 신더이 186호는 현재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0일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중국 주재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다오위다오에서 연행해간 중국 어선과 어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음. 양 부장의 주중 일본 대사 초치는 송타오(宋濤) 외교부 부부장과 후정웨이(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에 이어 세 번째임.
- 양 부장은 일본대사에게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고 엄정한 교섭을 요구했음.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일과 9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다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이 국내법을 적용한 것은 황당하고 불법적이며 무효한 것으로서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아울러 다오위다오로 어업지도선을 급파했다고 밝혔음. 이 어업지도선은 군함을 개조한 것으로, 일본의 순시선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 8일 낮 베이징(北京) 소재 주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여분간 일본 정부의 중국 어선 나포와 선장 구속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던 ‘다오위다오 보존 중국 연맹’은 타이베이(臺北)과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규탄대회를 다시 여는 한편 국경절인 다음달 1~7일 사이에 다오위다오 상륙시도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됨.
-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7일 오전 7시 센가쿠 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위법조업을 발견하고서 순시선 2척이 접촉해 이를 경고했으나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자 오키나와로 나포했다고 밝혔으며 8일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을 구속하고서 9일 현지 검찰에 송치했음. 일본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자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됨.

#### ● <日 방위백서 중국 경계심 한층 강화>(9/10)

- 2010년판 일본 방위백서의 특징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임.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중국 국방 정책의 불투명성과 동중국해에서 해양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명시했음. 또 중국 인민해방군의 첨단기술화나 전력 전개 능력의 향상, 항공모함 연구개발 동향을 상세하게 적어놓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전면에 드러냈음.

- 산케이신문은 지난해까지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을 이번에는 중국 군사력 자체를 ‘우려 사항’이라고 적시한 점이 큰 차이라고 지적했음. 이런 변화의 배경에 대해 2010년판 방위백서를 작성하고 있던 지난 3~4월에 중국 해군 함정이 두차례에 걸쳐 오키나와 부근 공해상을 통과해 혼란을 벌이는 등 태평양 진출 의지를 보인 데 영향을 받아 표현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 또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추진해온 ‘정보화’에도 주목해 지난해 10월의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조기경계관제기나 무인기 등 선진 장비를 거론하며 “정보화의 진전을 안팎에 과시했다”고 분석했음.
-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통치가 일정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로 인한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이나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 불안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했음.
- 미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군 해병대가 주둔하는 오키나와(沖繩)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주일미군의 역지력은 해.공군과 해병대가 일체를 이뤄야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위성의 입장을 강조했다.

#### ● 中, 日.印과 동시 외교 마찰(9/8)

- 중국이 일본, 인도와 동시에 외교 마찰을 빚고 있음. 중국 외교부의 쑹타오(宋濤)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전 닌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자국 어선을 일본 순시선이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고 관영 차이나테일리가 8일 보도했음. 쑹 부부장은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선 나포를 불법이라며 그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이에 앞서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중국어선 나포와 관련, “일본측에 엄숙한 항의를 제기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음. 일본측은 8일 중국어선 선장(남.4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음.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접촉한 닌샤오위다오는 일본과 중국,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임.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날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음.
- 그런 반면 중국은 인도의 중국 비판에는 ‘로키’(low key)로 대응해 눈길을 끌었음. 중국은 만만한 싱 인도 총리가 이례적으로 “중국은 남아시아에 발판을 갖기를 원함.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



하고,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의 남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비판한데 대해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 장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함께 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공동발전을 실현해가야 하며 그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중국과 인도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발전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인도의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7일자에서 싱 총리가 중국이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아라비아해로 통하는 파키스탄 과다르, 방글라데시 치타공, 미얀마 카육푸에 항구를 건설하고, 인도-중국 사이에 낀 네팔에는 철도 건설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며 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음.

#### ● 日, 순시선 접촉 中어선 선장 구속영장(9/8)

-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접촉한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현지언론이 8일 보도했음.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7일 오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상에서 순시선 2척과 접촉한 중국 어선 선장(남.41)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음. 해상보안청은 중국어선이 위법조업을 발견한 순시선 2척과 접촉한 후에도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음.
-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어선의 선장을 오키나와로 연행한뒤 조사를 계속하고 있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접촉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과 중국,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임.

#### ● 中日, 센카쿠 열도 또 마찰(9/7)

- 일본, 중국과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접촉 사고를 빚은 뒤 양국이 서로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음. 7일 오전 10시15분께 센카쿠 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에서 북서쪽으로 12km쯤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요나쿠니호(1천349t)의 뒤쪽에 중국 저인망 어선의 앞부분이 부딪혔음. 일본측에 따르면 이후 순시선 미즈키호와 하테루마호를 추가 파견해 3척이 함께 중국 어선에 정선(停船)을 명령하며 추적했지만, 중국 어선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오전 10시55분께 구바지마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번에는 미즈키호의 우현(右舷)에 충돌했음.
- 이후 일본측은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붙잡았고, 오후 1시께부터 일



본 해상보안관이 중국 어선에 올라타 일본 국내법인 어업법 위반(입회 검사 기피)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나 기름 유출은 없었지만, 요나쿠니호의 난간 기둥 일부가 부러졌고, 미즈키호는 3×1m 넓이의 우현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선에 탄 선원 약 15명 중 부상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사건이 벌어진 뒤 양국은 한치 양보 없이 외교 공방을 벌였음. 중국 측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일본측에 엄중한 신청을 했다”는 말로 일본에 항의한 사실을 밝혔음. 장 대변인은 또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고, 추가 대응을 할 권리는 일단 유보해두겠다”며 일본측 대응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일본측의 기타노 미쓰루(北野充)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도 주일 중국대사관의 류샤오빈(劉少賓) 공사참사관을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항의했음.

#### ● <中, ‘북극자원 노린다’ 日보도에 발끈>(9/7)

- 중국 정부가 자국이 ‘북극의 자원을 노린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의 기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해양국 극지판공실의 왕용(王勇) 처장은 7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주관적인 억측에 따른 것으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음.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4일 “중국이 북극에 기지를 건립해 모든 자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외교 인사를 인용, “중국이 북극을 과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의 목적은 북극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비(非)연안국가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음.
- 왕 처장은 이 보도와 관련,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정상적인 과학적 탐구 행위를 경제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음. 왕 처장은 “중국은 1999년과 2003년, 2008년 등 3차례에 걸쳐 북극 탐사를 했고 올해도 4번째로 북극 탐사에 나섰다”면서 “현재 북극탐사 임무를 띤 쉘룽(雪龍)호는 기상연구용일 뿐 자원탐사 기능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번 탐사의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중국의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탐구하려는 것이라고 왕 처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극에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등 각국의 기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의 탐사행위는 각국과 공동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자원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음.



## 바. 중·러 관계

### ● 中, 러 등 5개국 카자흐서 對테러 훈련(9/11)

-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10일 카자흐스탄에서 합동 대(對)테러 기동 훈련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평화사명 2010’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5개 회원국에서 5천여명이 참여, 오는 25일까지 테러와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를 분쇄하는 훈련을 벌일 예정임.
- 중국 국방부 장엔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SCO 회원국간 상호신뢰와 실제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실시됐다고 밝혔음. SCO는 지난 2007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역의 체바르쿨 훈련장에서 평화사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이 7번째 대테러 합동훈련임. SCO는 지난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우호 증진, 협력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회원국 이외에 이란, 인도, 몽골, 파키스탄이 옵서버로 있음.

## 사. 기 타

### ● 靑-크렘린 ‘수시 전략대화 채널’ 구축(9/10)

- 이명박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오후 (현지시간) 야로슬라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음.
- 야로슬라블 시내 ‘아레나 2000’ 회의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협조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러시아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밝힌 3단계 통일방안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역량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음. 이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되면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남북 문제에 관해 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방식을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전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



음. 양국은 지난 2008년 한·러 정상회담 당시 러시아산 가스를 PNG(파이프라인 방식)으로 2015년부터 30년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파이프라인의 북한 관통 문제로 이 계획이 난항을 겪자 CNG(압축천연가스) 또는 LNG(액화천연가스)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중임.

- 이 대통령은 이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조선소 건설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협력사업에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두 정상은 군사기술 및 기초응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 비즈니스 서밋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한 세션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음.

### ● 한·러정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확대안 논의(9/10)

- 이명박 대통령은 방러 이틀째인 10일 오전(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정책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위해 야로슬라블에 도착했음. 이 대통령은 포럼 연설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할 예정임.
-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에너지·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특히 전날 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면담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만큼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푸틴 총리와 1시간가량의 회담에서는 주로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자동차·과학기술, 교역·투자 협력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음.
-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외에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와도 각각 회담을 할 예정임. 이어 세계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국가발전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음.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정치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창설해 이번이 두번째로 주제는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효율성’임. 이 대통령은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함께 한 뒤 다시 모스크바로 이동해 전용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임.



### ● 中 자칭린, 대만에 “정치신뢰 강화하자”(9/10)

-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주석이 대만의 쑨원(連戰) 국민당 명예주석과 만나 양안(兩岸)간 정치신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 10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자칭린 주석은 9일 대만 동포포럼 참석차 방중한 쑨원 주석을 상하이(上海)에서 만나 “양측이 정치적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음.
- 그는 “정치적 신뢰를 심화시키는 것은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되는 동시에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신뢰 강화는 하나의 중국을 천명한 ‘9.2공식(共識)’과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음. 그러면서 “최근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으로 양안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았다”면서 “양안 동포가 함께 노력해 크고 작은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중화민족의 태평성대란 위업을 함께 달성하자”고 제안했음. 또한 “쉬운 일부터 먼저하고 경제를 먼저 정치는 나중에 하면서 박자를 조절하고 순서를 점진적으로 한다”는 양안관계에 관한 중국의 원칙도 재차 언급했음.
- 쑨원 주석도 “양안관계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양안 동포는 한 가족이며 대만인도 중국인이며 중화민족의 자손”이라면서 “역사적 양금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해결해 21세기를 중화민족의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음.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중국과 대만은 협력이 부쩍 강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ECFA 체결로 인해 경제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 ● <러 언론,李大統領 방러에 높은 관심> (9/9)

- 러시아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사실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음.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9일(현지 시간) ‘이명박 대통령, 한국을 업그레이드시키다’는 제목으로 4면을 할애해 이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활약상을 실었음.
-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경제 월드컵 모임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한국에 있어 건국 이래 최대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높아지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100년 전 지구촌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새판을 짜는 정상회의 주최국가로 등장했다”고 평가했음.
-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음. 이즈베스티야는 “한국이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심에는



실물 경제 전문가인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밝혔다. 또 “임기 중반에 접어든 이 대통령은 중도와 실용, 공정을 내걸고 각 부문 개혁을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헌과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사업 등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노브이에 이즈베스티야’는 이 대통령이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번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포럼은 민주주의 국가의 효율성 정도를 분석하고 현대 민주주의 표준을 규정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참가국과 한국의 현대화 경험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과거 서울시장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시절을 조명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높이 평가했다.
- 신문은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과 도시 녹화사업 및 정비사업을 했다”면서 “또 1970~80년대 기업 경영자로서 ‘지식의 경제학’을 만들어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동시에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 ● 정부, ‘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9/8)

-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對) 이란 금융거래가 금지됨.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와 함께 입국이 불허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분야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 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연수를 금지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단 1 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4만 유로(약 6천만원) 이상의 모든 금



용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 유로 이상 일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음. 정부는 이와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음. 정부는 이어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임.

-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기로 했음. 정부는 무역분야와 관련, 핵공급그룹(NGS),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바세나르 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 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도 축소하기로 했음.
- 운송·여행분야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行) 또는 이란발(發)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이 같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화물공항 공기에 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임.
-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하기로 했음.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이란의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과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등을 금지해나갈 예정임.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밖에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국내 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음.
- 정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한국 등 ‘中強국가’, 중국 견제 나서” <IISS>(9/8)

- 금융위기 이후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7일 발표한 연례 전략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이 나라들을 ‘중



강 국가(Middle powers)'로 분류한 뒤 이들이 역내에서 공조를 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이 금융위기의 여파와 소모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풀이했음. 이들 아시아 국가가는 경제력,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이 역내에서 목소리를 더욱 높이려 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특히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같은 국가들이 중강국가 협의체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한국은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강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보고서는 한국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누르고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원전공급계약을 예로 들었음. 호주와 베트남은 국방비를 눈에 띄게 증액하면서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잠수함 등 군사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아시아 국가들은 또 중국과 인도가 서방국가에 맞서 기후변화 문제에서 공동전선을 펴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추로서 인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존 칩먼 IISS 소장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주요 20개국(G20)의 다른 국가들과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음. 그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관련해 “서방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실패한 시도를 지속하지 말고 알카에다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탈레반과의 협상과 주둔군 감축 등의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정부, 이르면 내일 ‘이란제재’ 발표(9/7)

- 정부는 이르면 8일 부처 합동으로 대(對)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초점이 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몇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소식통은 7일 “이란 제재방안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가 마무리됐고 일본도 지난주 제재방안을 발표한 이상 우리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정부 차원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멜라트 은행의 경우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유력하지만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란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제재 방침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됨.



- 일본은 지난 3일 내각 회의를 통해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88개 기관 및 24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대상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 “러, 천안함 조사결과 곧 한국에 건넬 것”(9/6)

- 지난 6월 방한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던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끝내고 그 결과를 자국의 최고 군사안보협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에 넘겼다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4일 보도했음.
- 러시아는 자국 해군 소속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체조사단을 6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한국에 파견해 천안함 잔해를 둘러보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음. 통신은 자국 국방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군사 전문가들이 방한 기간에 확보한 증거물과 자료들을 심층 분석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모든 결과가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천안함 본체에 대한 외부 충격이 침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러시아 조사단이 내린 모든 결론과 분석 결과가 조만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현지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3일 러시아 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자국 해군사령부 관계자를 인용, “군사 전문가들이 조사 임무를 마무리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며 “해군 사령부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국방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 “천안함 문제는 군사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외무부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이어 모스크바 인근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세계정책 포럼 참석차 9~11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 中문화부장 “中.臺문화협정 추진”(9/6)

- 중국 국무원 차이우(蔡武) 문화부장이 중국-대만 간 문화협정서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949년 분단후 대만을 방문중인 최고위 중국 문화 관리인 차이 부장은 5일 타이베이(臺北)시 근교 국립 고궁박물관을 방문해 올해 6월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한 것처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문건 서명에 대해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리가 양안 문화협정 서명에



대해 언급하기는 처음으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장 빙쿤(江丙坤) 이사장이 양안이 내년에 문화교류를 중점 추진하고 문화협정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말한데 이어 나온 것임.

- 차이 부장은 6일에는 타이베이시에서 열리는 ‘2010 양안문화논단’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만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 성즈린(盛治仁) 주임 위원과도 처음 만날 예정임. 문화협정 거론과 양안 수장의 만남은 양안 간 문화 교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경제교류에 이어 문화 교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중국 국무원 부장이 대만을 방문하기는 1998년 7월 주리란(朱麗蘭) 과학기술부장 이후 12년 만이어서 양안 관계 개선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참고 1]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주요 일지>(9/10)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일본 정부는 10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주요 일지다.

- ▲1877년 = 일본 메이지 정부, 시마네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外一島)의 소속을 조사해보 라고 지시.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함. 이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과 관계가 없다고 다시 지시.
- ▲1900년 =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石島)를 울릉군에 편입.
- ▲1905년 1월28일 = 일본 내각회의, 독도 일본 편입 결정.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 한다’고시.
- ▲1905년 11월 = 대한제국,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 박탈됨.
- ▲1906년 4월 = 일본 ‘독도 편입’ 대한제국에 통보. 한국은 외교권 박탈로 대응 못함.
- ▲1946년 1월29일 = 맥아더 연합국 사령부 최고사령관, SCAPIN 677호 에서 울릉도, 리양쿠르 열암(竹島),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함. 이후 연합국은 1952년 4월 대일 강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변경한 적이 없음.
- ▲1952년 1월18일 = 이승만 대통령, 독도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 해양에 포함하 는 ‘평화선’ 선언.
- ▲1953년 4월 = 일본인들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 조난 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함. 이 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일본 인들을 몰아냄. (1954년 5월설도 있음)
- ▲1965년 6월22일 = 일본, 한일 국교정상화 및 한일어업협정 논의 과정 에서 독도에 대해 “별 가치가 없는 섬이니까 폭파 시켜 버리면 어떠냐” 제의.
- ▲1977년, 1984년 =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 등 영유권 망언.



- ▲1996년 2월1일 = 일본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 ▲1996년 10월 =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
- ▲1998년 9월 = 한일 양국 어업협정 타결. 독도는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 정부, 독도 지위(영유권)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발표.
- ▲2000년 9월19일 =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는 우리 땅” 망언.
- ▲2000년 12월 = 일본 자위대, 특정 섬 탈환 작전 훈련.
- ▲2001년 2월27일 =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 ▲2005년 2월23일 = 시마네현 의회, 독도 편입 100주년(2005.2.22)을 기념해 2월22일을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망언.
- ▲2005년 3월8일 = 일본 경비행기, 독도 상공 진입 시도.
- ▲2005년 3월16일 =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 ▲2005년 3월17일 = 한국,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 취한다’는 내용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기존의 ‘조용한 외교’ 방침 일부 수정)
- ▲2005년 3월 =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국회서 “일본 영토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해야 한다” 발언.
- ▲2005년 4월26일 = 한국 국회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
- ▲2005년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처음 포함.
- ▲2006년 3월29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고 요구.
- ▲2006년 4월18~22일 =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차 측량선 출발. 차관급 협의 후 일본 측량선 귀항.
- ▲2008년 3월 = 일본 정부,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수록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의지 감안해 실지 않고, 지도요령 보완하는 해설서에 담기로 함.
- ▲2008년 7월14일 =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한국,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

- ▲2008년 12월 =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발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표현.
- ▲2009년 12월25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독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게 함.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 “독도는 일본땅” 발언.
- ▲2010년 4월 =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일본 국회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안 쓰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답변.
- ▲2010년 5월11일 =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일본 시민들에게 공개.
- ▲2010년 9월10일 = 일본 방위백서, 6년 연속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noja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10/0503000000AKR201009101144004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